

# 인사 청문회·경북도의회와 상생 등 성과

## 전남도의회 결산

민선 6기 2년차를 접어든 전남도의회가 과거보다 수준 높아진 행정사무감사, 청문회를 통한 인사 정책 견제, 다양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및 광주시·전북도의회와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내며 2015년을 마무리했다.

129일간의 일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대해 날선 비판과 견제에 나섰다. 평가도 받고 있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구한 건수는 모두 1104건(12월 7일 현재)으로 지난해 1017건보다 9% 늘었다. 또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제안으로 이낙연 전남지사와 체결한 전남도 산하기관청 인사청문회 협약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와 3개 출연기관(전

## FTA 대책 건의안 등

### 조례안 136건 처리

### 집행부 비판·견제역할 특출

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북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 도대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전남북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이어 9월에는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대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공동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남도의회가 1년간 처리한 조례안은 136건으로, 43%가 증가했다. 이 중 71건이 의원발의로 제정돼 전체 조례안의 절반

을 넘었다. 호남고속철도 서대전 경우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6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모두 24차례나 여는 등 도민 의견의 도정 반영에 힘썼고, 8개의 연구단체에 95명의 의원이 16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광역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하여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활동도 전개했다. 지난 12월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방안 통과는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촉구결의

안을 국회법사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는 등 외부 평가도 과거보다 나아졌다.

이밖에도 경북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 지난 2010년 발족한 광주·전남·전북 시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활성화, 일본 후쿠오카현 및 고치현 의회와의 우호협력 강화 등 외연도 넓혔다.

명현관 의장은 "57명 의원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1년을 보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으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위안부 '합의 해석·협상 과정' 공방

### 日 최종해결 조건 '10억엔 출연' 방점

### 韓 "사죄·반성에 반하면 합의 위반"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의 해석과 협상 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합의 이전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선제 공격'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과 반박'의 행태가 합의 하루 뒤인 29일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노출됐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설치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만 출연하면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이 예산만 제대로 출연하면 책임 있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해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 "불가역적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내용이나 과정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간 합의 이후에도 ▲ 합의 도출 뒤 공식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보류 합의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는 바 없다"면서 "(우리 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정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준비 착수

우리 정부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의 핵심 합의사항인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전남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에 합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정부 예산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재단설립 준비작업을 위해 내년 초 외교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체제를 공식 가동하고, 내

년 상반기에는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재단을 통해 서로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및 요양·간병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연구원장

### 박성수 후보자

### 내달 7일 청문회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시·도의회 인사청문회가 2016년 1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다.

전남대 교수 재직기간 외부 활동, 연구실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사회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전달받은 시·도의회가 원장 후보로 추대된 박성수 전남대 경영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16년 1월 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위원은 시·도의회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했다.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한다.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인 박 후보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이사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해박할 것으로 예상돼 주로 교수 재직시절 문제가 청문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허성관 초대 원장은 시·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임명됐으나 여론의 압박을 못견디고 20일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나눔의 집 찾아간 외교 2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9일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U대회 성공 ... 윤장현 시장 직무수행 평가 수직 상승

### 한국갤럽 조사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동 6위

2015년 초부터 상반기까지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하위권과 꼴찌를 오르내렸던 윤장현(사진) 광주시장에 6개월여 만에 전국 시·도지사 중 가장 큰 오약을 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윤 시장은 올해 10여 차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수차례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가장 좋은 성적도 13~14위로 역시 하위권이였다.

이 때문에 시민운동가 출신 아마추어 행정가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윤 시장은 이번 상위권 진입으로 선거때부터 제기됐었던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

특히 위암 수술 이후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윤 시장 행정의 추진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갤럽은 지난 7월~12월 셋째 주까지 6개월간 전국 성인 1만7080명에 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은 결과, 윤 시장이 대비 하반기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광주라고 발표했다. 윤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충북지사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윤장현 광주시장에 대한 긍정평가(‘잘하고 있다’)는 취임 직후인 2014년 하반기 40%, 올 상반기 43%에서 올 하반기 들어



56%로 상승했다.

윤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의 수직 상승은 ▲메르스 사태 속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호남고속철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이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갤럽의 올 상반기 시도지사 평가에서 7위였던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번 하반기에 8위로 떨어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與 “日 첫 책임인정” 野 “2차 굴욕협정”

### 위안부 문제 정치권 반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타결된 한·일 협상을 두고 새누리당은 진일보한 합의였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며 성토했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양국이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문

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깊은 상처를 입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 처음으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아베 총리가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어제의 한일협회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 원에 도장을 찍어 제1차 한일굴욕협정을 한 것에 이어 제2차 한일굴욕협정으로 단정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전,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